

공동주택 폐비닐류 수거중단 대응방안

□ 배 경

- 중국의 폐지, 폐플라스틱 등 4개유형 고체폐기물 수입금지('18.1월)로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주 수입원이었던 폐지 가격하락(120원→60원/kg)에 따른 재활용업체 경영수지 악화
- 고품연료(SRF) 및 물질재활용(MR) 업체의 상반기 EPR 분담금 할당량 소진으로 수익성 악화
- SRF 제조업체 및 사용시설에 대한 정부의 품질관리강화에 따른 영업정지 등으로 수요처 사용축소

□ 그간 추진사항

- 폐비닐류 수거·처리업체에 대한 실태 파악(3.22~3.27) 및 관련업계·자치구 등과의 간담회(3.28~30) 개최
 - 재활용업체 정상수거처리 행정지도, 분리배출 표준안 마련 및 교체 요청 등
- 서울시 실태조사 및 분리배출 표준안 마련, 대응방안 언론 배포(3.30)
 - '비닐류·스티로폼 올바른 분리배출요령' 마련·자치구 통해 관리사무소 전파
 - 수거실태 모니터링 및 정상배출 조치,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, 비닐봉투 사용억제 홍보 강화 등
- 폐비닐 적체여부 및 분리배출 안내문 게첩 등 현장점검(4.2~3)
 - 기후환경본부 전직원, 5급 팀장급 25명 자치구 지정방문 실태파악 및 행정지도
- 자치구 청소과장 긴급회의 개최(4.3)
 - 폐비닐 등 수거거부로 적체시 자치구에서 우선처리,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수거조건 등 협의
-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·운반업체 간담회 개최(4.4)
 - 미 수거 사례 방지 및 적치물량 조치 협조

□ 조치계획

① 폐비닐 수거중단에 따른 조치

- 폐비닐류 수거중단 모니터링 강화
 - 25개 자치구 전 공동주택 대상 수거·적치 현황 파악(4.2~상황 종료시)
- 적치 폐비닐 자치구 대행업체 등을 통해 즉시 처리
 - 시·자치구 신고센터 운영으로 시민불편 최소화
- 공동주택 재활용품 공공처리 방안 검토
 - 자치구·관리사무소·입주자 대표·수거업체 간 합리적 수거방안 등 협의

②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

- 폐비닐류 재활용 의무율 상향 : '17년(65.3%) → '18년(70%) → '19년(75%)
 - 연간매출액 10억 이상 제조업·대형종합소매업, 연간 3억이상 수입업자
- 폐지 등 폐자원 해외수입 제한조치(폐지가격 '17년 130원→'18년 90원/kg)
- 물질재활용(MR) 제품의 공공부문 사용의무화 등 판로 확대
- 검정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생산·유통 등 제한

③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및 분리배출 홍보 강화

-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대상 사업장 시·구, 시민단체 합동점검
 - 편의점, 약국, 기타 도소매업 (사업장 면적 33㎡ 초과)
- 비닐봉투 다량사용처 사용억제 및 자체 협조 요청
 - 대형유통센터, 백화점, 제과점, 재래시장, 편의점, 약국, 물류센터, 중·대형서점, 화훼유통업체, 외식업중앙회, 제과협회 등
- 언론사 협업, 지하철, 전광판 등 공익매체 활용 비닐봉투 줄이기 홍보 강화
 - 언론사 협업 비닐봉투 사용줄이기 기획보도, 홍보물 광고 등 추진